

##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(권익위·법무부)

### □ 과제목표

- 반부패 개혁을 위해 부패방지체계 강화,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 확대, 국민권익 보호,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강화 등 추진

### □ 주요내용

- (부패방지시스템 구축) '17년 반부패 협의회 설치·운영, '18년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및 종합적 반부패 정책 수립·추진
  -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,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'국가청렴위원회' 신설
    - \* 현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·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 별도 검토
- (공익신고자 보호) '17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, '18년부터 국민소송제도 도입·시행
  - '18년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,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및 공익신고자 필요적 책임감면제 등 추진
- (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) '17년 5대 중대 부패범죄(뇌물, 알선수재, 알선수뢰, 배임, 횡령)의 처벌기준 강화
  - '18년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 상향을 통한 국민참여 재판 대상 확대
- (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) '17년에 국민중심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업체 구성 및 국민감사 청구대상 확대
  - 다양한 방식의 국민의견 수렴에 기초한 반부패 정책 마련, 민관협업체 정책 모니터링 실시, 반부패 정책 추진과 성과의 평가('19년)
- (시민공익위원회 설치) '19년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및 공익법인 투명성·공정성 강화

### □ 기대효과

-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(CPI) 20위권으로 도약('16년 52위)